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 향후 과제

# 재정 · 새로운 수익 발굴 · 법률 정비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100일을 맞아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행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4개 특별자치시와의 협업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남은 과제를 알아본다.

#### ▲4개 특별자치도 특징

전북특별자치도는 1월 18일 출범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를 활용해 공통 과제 협업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출범 배경이 유사한 강원과는 더 강화된 공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06년 제주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도에 이어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는 총 4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출범 배경이나 시기, 담고 있는 특례들이 동일하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한 재정, 자치 특례 등에 대해 연대 강화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조사·연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은 131개, 제주 481개, 강원 84개 조문 등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은 재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직은 18년차 제주도 장기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종도 제주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 부여 필요성을 요청하는 등 특별자치시·도의 보다 수준 높은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제 주권을 지닌 재정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강원과의 협력

전북은 1단계 정부개정을 마치고, 2단계 특례를 발굴 중이다. 교통부세 지원 특례를 포함해 도민 밀착형 특례로 40여건을 마련해 부처 설득

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원은 전북이 먼저 담은 이민, 신재생에너지 공공 활용, 야간관광산업, 국제회의산업 육성, 한우 보호·육성 등도 포함해 3차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아이디어를 모으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4월 공동연구팀을 가동했고, 5월 전략비전 워크숍을 6월에는 국제세미나 등으로 양 기관 교류를 확대하고, 특강, 정치권 간담회 등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 ▲앞으로 과제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과 인건비를 요구해야 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84명의 인력이 추산되며, 재

정 분야에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행정안전부에는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충교부세 등을, 기획재정부에는 균등회계 별도계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지속 요구할 대목이다.

두 번째, 새로운 재원발굴이 있어야 한다. 제주는 공황면제점 수익을 JDC가 관리하며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순환시키고 있다. 또, 강원은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카지노) 수익을 이용할 방안도 찾고 있다.

전북에서도 규모있는 수입원을 찾아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5대 산업을 비롯 새로운 수익 발굴에 집중도 필요하다.

세 번째, 법률의 지속적 정비이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국토기본법,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법 등 연 관련 법이 98개에 이른다. 신규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거나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개정 등이 연중 정비돼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이면 본격화되는 전북특별법의 75개 사업의 실행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특화단지 조성, 특구 지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바뀔 것이 기대된다.

박현규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자치모델의 성패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는 지속 소통하여 함께 키워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 민주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장관, 여론 호도 즉각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이에 따라 농가경영이 위협받는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며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이라며 "단일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교육청 차원 유보통합 선도 역할 해달라"

####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 부교육감 대상 정책 질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유경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방향과 도교육청의 차원의 대응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유·보 통합 관련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교원 선발과 더불어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불안감은 볼 보듯 뻔하다"며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

하고 준비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문했다.

김슬기 위원(비례대표)은 "통폐합 관련 매뉴얼 부재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업무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통폐합 학교의 업무 혼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근속승진 시기가 되었음에도 인사 적체로 승진하지 못한 일선 근무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무보직 승진제도 등 도교육청 차원의 인사적체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통합구 조정과 통학버스 자부담 축소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화웨이 디지털파워 방문

중국을 방문중인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7일 선전시에 위치한 '화웨이' 디지털파워를 방문해 전기 자동차 고속 충전 시스템, 태양광 등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환경부 군산시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시행업체 선정 즉각 중단해야" 촉구



환경부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은1·2동)이 최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가 사망한 채로 입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됐다"면서 "해당 건설사는 2020년 사업비 588억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지난 3월 19일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공사 수주를 앞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가 구속됐고, 같은 달 25일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비자금 2억4,000만원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한 의원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참여업체를 지난달 9일부터 모집해 7개 업체가 참가 의향을 제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5월 10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체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서 관계자들이 급하게 사업시행자 모집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검찰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방사능 방재 물품 관리 제대로 이뤄져야"

#### 전북자치도의회 문건위, 도민안전실 대상 추경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7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문순우 의원(군산4)은 방사능 방재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구연한이 지난 방재 물품들을 제대로 재검비해 향후 방사능 방재 물품의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임정명 의원(남원2)은 재일임 가능 재난에·경보 스마트앱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해 단방향 방송은 인지가 높지 않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지역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서 앱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사업 관련, 작년과 올해 선정 대상 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선정 지역을 늘려서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재난상황실 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 없이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구축사업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면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 "세계한인비즈니스, 잼버리와 같은 일 반복 안돼"

#### 전북자치도의회 농산경위, 기업유치지원실 등 대상 추경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7일 제409회 임시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행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운영 사업과 관련해 성공을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재외동포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 재외동포청, 전주시가 역할을 잘 분담해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지역기업-청년 희망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5억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꼬집었다. 산업부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전액 삭감됐다고 하나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 설립 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으며 새만금개발청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리에 치중되어 사후관리 등 입주 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향후 새만금지역은 2차전지, 방위산업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관련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해 많은 부처가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재 사고율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할 만큼 높다고 꼬집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 같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많은 노동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연구원 시군 이전 방안 검토를"

#### 전북자치도의회 행자위, 기획조정실 등 대상 추경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7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의 사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예산절감 등 효과를 분석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은 글로벌 생명경계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구성·운영 근거 조례 제정 상황에서 추경에 글로벌 생명 경계도시 종합계획 연구용역

비 편성을 지적했다. 연구용역 전에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연구원 건축 시설비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을 시군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전북연구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출발이 늦은 만큼 센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 "확보된 국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사용토록"

#### 전북자치도의회 환복위, 복지여성보건국 등 대상 추경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7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사회서비스원 이전비 지원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 교육 및 직원 사무공간이 협소해 서비스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들

의 교육 및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은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 공립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등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문제제안으로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특별자치

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 본예산 이후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국비 확보분만큼 이미 편성된 도비를 감액한 문제를 지적하며, 확보된 국비를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시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실수요 반영에 대하여 질의하며 14개 시군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위기기업 지원에 대하여 문제제안으로 설명을 요구하며 문제제안으로 설명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